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3회 중소기업분야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07:3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 목적/목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민생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공부모임 추진
 - 20대 국회 세부 추진과제 평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전망과 대책 토론
 -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민생·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 포럼 개요

- 기간: 2020년 6월 2일~7월 7일, 매주1회(화요일, 총6회), 07:30~09:1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민생 개혁과제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을지로위원회 / 민주연구원
- 참석: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재선 의원 참여 적극 독려)

☐ 운영 방향

- 거시적 담론보다는 20대 국회 추진 과제 평가와 21대 국회 개혁 과제 중심 토론
- 유럽과 미국(뉴욕·캘리포니아주 등), 일본 등의 입법동향 비교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관련 시민사회, 노조 등에서 제기하는 대책 점검
- 민변,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21대 국회 정책 및 입법과제 소개와 활용

☐ 운영 방식

- 패널: 매회 재선 이상 의원을 좌장·토론자로, 외부 전문가를 발제·토론자로 초빙
- 대상: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재선 의원 참여 적극 독려)
- 진행: 매회 발제와 토론 등 총100분(1시간 40분) 진행
 - 발제 20분(1인), 지정토론 15분(1인),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60분)
- 포럼 결과에 대해 <쟁점리포트> 발간 및 <종합토론회> 개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 기간 : 2020. 6월 ~ 2020. 7월(총6회)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을지로위원회 / 민주연구원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회 (금융)	2020.6.02.(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내용: 과잉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라임 등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대책, 파산·워크아웃 등 한계채무자 경제회생 문제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 발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보조발제/토론: 이상훈 변호사
제2회 (공정경제)	2020.6.09.(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21대 국회에서 상생·공정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내용: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반성장 등 입법과제(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온라인거래(플랫폼) 공정화 법률 등) • 좌장: 우원식 국회의원 • 발표: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보조발제/토론: 노종화 변호사
제3회 (중소기업)	2020.6.16.(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내용: 독일과 미국 등의 벤처 육성정책과 한국의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 비교평가, 벤처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평가, 공공벤처펀드 육성방안 등 • 좌장: 박홍근 국회의원(을지로위원장) • 발표: 이병현 광운대 교수(중소기업연구원장) • 보조발제/토론: 김남주 변호사
제4회 (자영업)	2020.6.23.(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플랫폼경제 확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내용: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도시계획 차원의 대형유통점 진출규제 정책 분석, 중소기업상인 보호와 지원특별법 제정, 자영업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서구의 전통시장 개혁정책, 상권분석시스템 등 • 좌장: 이학영 국회의원 • 발표: 위평량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 보조발제/토론: 양창영 변호사
제5회 (주거)	2020.6.30.(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 내용: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 사례, 공시가격 평가 제도와 보유세 제도 개혁정책, 유럽의 사회주택(공공임대) 공급정책 • 좌장: 윤관석 국회의원 • 발표: 임재만 세종대 교수 • 보조발제/토론: 이강훈 변호사
제6회 (고용)	2020.7.07.(화) 0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코로나위기 실업안전망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 내용: 코로나 위기 국면 고용유지 및 실업부조 대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의 실업(고용)안전망 재구축 방안(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차 산업혁명과 노동대책 등 • 좌장: 남인순 국회의원(최고위원/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 발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보조발제/토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3회 중소기업분야)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PROGRAM

☐ 개요

- 일 시 : 2020.06.16.(화) 07:3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제 :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을지로위원회 / 민주연구원

☐ 진행순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좌장: 박홍근 국회의원		
사전등록	~ 07:30	
개회 및 인사말	07:30 ~ 07:35	• 박홍근 국회의원(을지로위원장)
주제발표	07:35 ~ 07:55	• 주제: POST-COVID19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공공벤처펀드 조성 방안 • 발표: 이병헌 광운대 교수(중소기업연구원장)
보조발제/토론	07:55 ~ 08:10	• 주제: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 상생협력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발표: 김남주 변호사
종합토론	08:10 ~ 09:10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3회 중소기업분야)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CONTENTS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소개 i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ii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3회 프로그램 iii

발제문

- 1 POST-COVID19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공공벤처펀드 조성 방안 1
이 병 현 광운대 교수(중소기업연구원장)

보조발제/토론

- 1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 상생협력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1
김 남 주 변호사



발제문

**POST-COVID19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공공벤처펀드 조성 방안**

이 병 헌 광운대 교수(중소기업연구원장)

POST-COVID19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공공벤처펀드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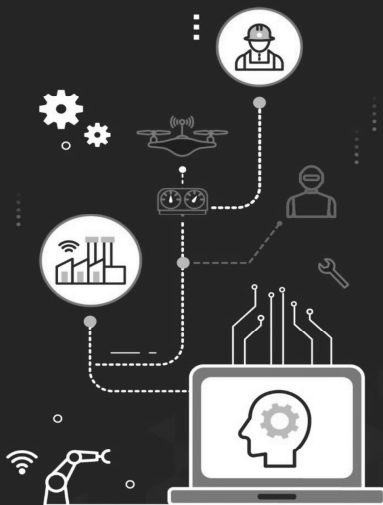


2020. 6. 16.

중소기업연구원장
이 병 현

Ky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CONTENTS



Ky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I 코로나의 충격과 중소기업 정책방향

II 공공벤처펀드 조성방안

* 본 내용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단독 의견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I Chapter



코로나의 충격과 중소기업 정책방향

Ky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1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예상되는 변화

Untact Economy

▶ 새로운 소비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
- 플랫폼 기반 수출 판로 지원
- 스마트 가치사슬 재편
- 바이오 신사업 육성



Regional Economy

▶ 지역간 정책 차별화 및 지역 공급망 확충

- 지역정치의 역할 강화(지역화폐 등)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 AI,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 핵심기술 보호
및 리쇼어링 가속화

- Regional Value Chain(RVC) 확산



SMART Economy

▶ 효율에서 복원력으로의 경영패러다임 변화

- * 비용절감보다는 산출의 안정성 선호
- 비용절감보다는 산출의 안정성 선호
- 제조공정, 자본, 규제 등의 스마트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급네트워크 전파
- * ERP, SCM, CRM, MES 등을 통합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 민간 역량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 경기불황 해소를 위한 재난소득(기본소득)제공
- 대기업과 플랫폼의 시장독점 견제
- * 공정경쟁 및 공공성 강화
-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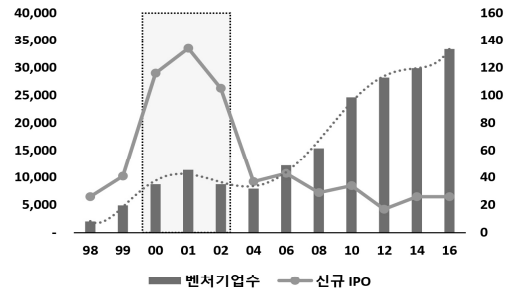
2

정책 방향

코로나19 이후 위기 반전의 방법, 스마트 경쟁력

■ IT 인프라 구축은 IMF 위기 극복의 원동력

- 중소기업청(1996년),
코스닥(1996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97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1998년)
⇒ “1차 벤처붐”의 초석



■ Untact Economy 대응 : 파격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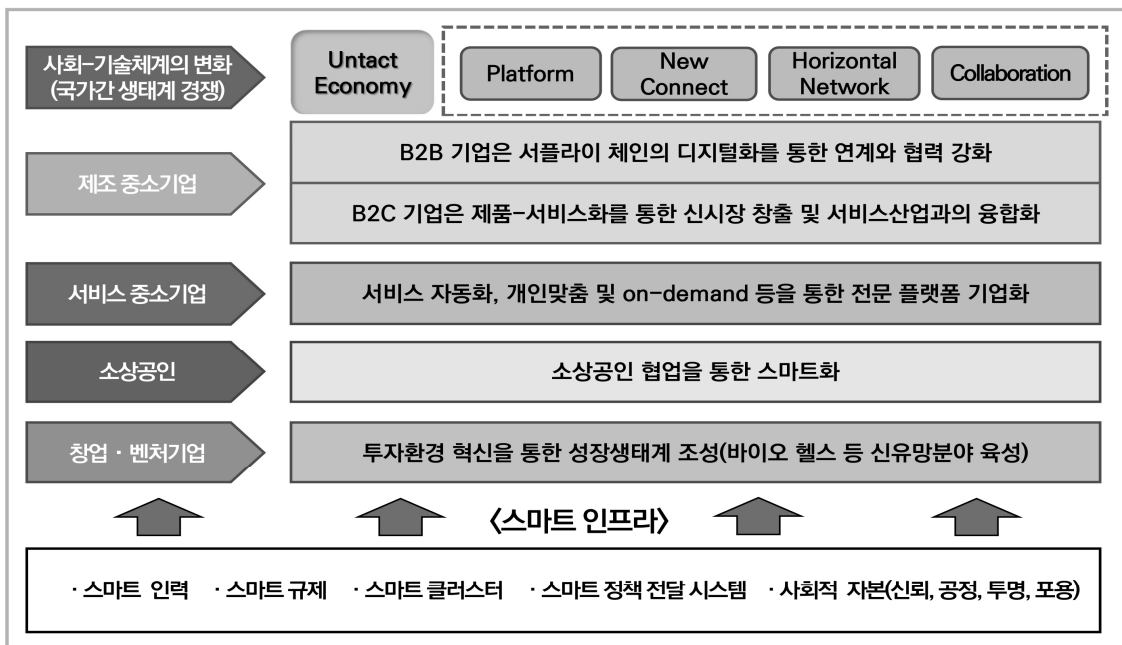
- ❶ 스마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추격자(Follower)를 넘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길에 과감히 도전하는 선도자(First Mover)
⇒ IMF 경험을 밑거름 삼아 선제적 준비 필요

5

3

정책 추진 체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6

4

정책 과제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 공급망 구축(B2B)

■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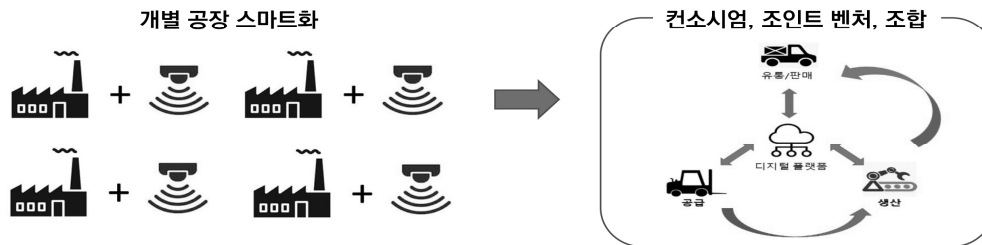
As-Is	
양적	보급 수에 중점
보편적	수준과 무관하게 매칭 지원
개별공장단위	개별 공장 단위 선정·지원
전통가치사슬	생산공정중심 지원



To-Be	
질적	스마트수준(고도화)에 초점
경쟁적(차별화)	수준별로 차등 지원(매칭비율)
공급망 단위	컨소시엄, 조인트벤처, 조합 중심
디지털가치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중심 지원

② 디지털 플랫폼 중심 개방형 혁신 유도

- 제조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형 혁신 유도
 - 세계 스마트제조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중심 표준화 추진
 - 플랫폼 참여 컨소시엄, 조인트 벤처, 조합이 주도하는 이업종 교류·협업 촉진



7

4

정책 과제

수출 대행 벤처 육성 스마트 해외진출

■ 국경봉쇄, 선진·신흥국의 동시다발적 수출여건 악화에 대응

① 구매기업별·업종별·국가별 특화 수출대행 플랫폼 벤처기업 육성

- 신남방·신북방 확대,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및 동종·유사업체 간 협력하는 수평적 GVC 조성

② 코로나19 이후 한층 제고된 브랜드 K의 위상을 활용한 중기 해외진출 가속화

- 브랜드 K의 인지도 제고를 활용한 박람회, 마케팅 지원 및 해외 수요 대응 신제품·서비스 개발

③ 기존 B2C 위주의 수출지원 정책을 B2B로 일부 전환·지원

- 중기부 해외전시회 및 전자상거래에서 B2B 비중 확대(예: 글로벌 대기업과의 온라인 B2B 구축)
 - GP(KOTRA) 및 O.P.E.I(KITA)에 중소·스타트업 포함 지원
- * GP(KOTRA, Global Partnering) 및 O.P.E.I(KITA, Open Innovation Program Exchange Initiative)

④ 비대면 수요 관련 스타트업의 R&D 및 현지진출 지원에 초점

-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관련 기술과 SW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R&D+현지진출 지원

8

4

정책 과제

제조 + 서비스 R&D(B2C)

-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 일상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른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서비타이제이션(Sevritization) 가속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 활성화

- ▶ 플랫폼 R&D 지원 - 중소제조업 + IT 개발 업체 + 유통 및 서비스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랫폼화를 위한 R&D 지원

전통 제조업 Stand alone형 R&D

제품(Product) 제공자

▶ 전통 제조업 R&D의 한계

-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을 서비스 중심 모델로 재편 필요

▶ 낮은 수준의 국내 제조업 서비스 융합

-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0.23)는 주요국 평균(0.43) 대비 미흡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R&D

플랫폼(Platform) 제공자

▶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가속화 (Manuvise: Manufacture+Service)

- 제조과정 디지털화와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함
-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조 영역으로 진출 & 제조업 대비 수익성 높은 서비스업으로 영역 확대
- 플랫폼 제공자로 위상 전환
(예) General Electric Capital Service, Coway 등

추진과제

- 서비스 융합을 위한 R&D 지원 방향 재설정 - 설비 위주 지원에서 데이터, 기술자문서비스 등 지출 대폭 허용
인건비 전용 제한 철폐, 위탁연구개발비 제한 완화(현행 40%)
- Scale up 투자 연계 - 제품 혁신 후 서비타이제이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후속 투자 연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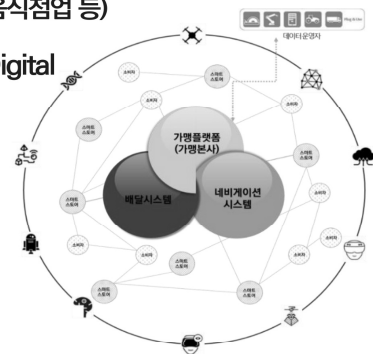
4

정책 과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프랜차이즈 디지털 플랫폼의 3가지 유형 개발

- ▶ Franchise형 : 아직 스마트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사의 강한 통제력에 의한 Digital 점포관리 시스템 도입(예 : 소매업, 음식점업 등)
- ▶ Voluntary Chain형 협동조합 :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Digital 능력을 조합이 취합하여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 이를 전 가맹점에 보급하여 활용(예 : 개인서비스업 등)
- ▶ Network형 협동조합 : 조합의 공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조합원 간 기술·정보공유, 상호거래 및 연대 등을 통한 Digital Co-work 구축(예 : 소공인, Digital 기반 신사업 등)



추진과제

- 스마트스토어, 프랜차이즈의 개별 지원이 아닌 플랫폼 중심의 통합 인프라 구축과 R&D 지원
-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기상청 등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
- 소상공인 특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육성

10

4

정책 과제

공공성 귀환을 위한 스마트 공유경제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매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④ 과거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소관:정무위)을 발의하였으나, 검색엔진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④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 투명성 강화,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관련 법제화 추진



11

4

정책 과제

기능별 Two-Track 스마트 인력

■ 중소기업 스마트 인력을 Operator와 Engineer로 구분한 Two-Track으로 지원

- ④ (Operator track)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양성 및 재배치지원 방안 마련
 - 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 내부적으로 확보, 양성, 재배치 가능한 스마트 인력(예: 작업자, 기능공)
- ④ (Engineer track) '스마트 인력 공동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에 따른 공동 활용 방안 마련
 - 장기 전문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스킬과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 인력
(예: 스마트공장 데이터·기술 관련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참고〉 중기 스마트 인력 공동 활용 플랫폼 사업(안)

- 지역별로 스마트 인력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들을 중소기업 수요와 매칭
- 온라인 홈페이지에 인력 공급 현황을 상시 업데이트,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고 해당 인력 활용
- 근로기간, 임금 및 보상체계 등 스마트 인력 풀 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 독일 사례(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인력 공동 활용)

- AGZ(Arbeitgeberzusammenschluss) Rueden
- KIM(Kooperations-Initiative Maschinen Region Braunschweig)

12

4

정책 과제

혁신 가속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규제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및 효율적 규제업무 추진

① 비대면 원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온라인 기반 사업을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
- 개인정보보호 규제수준의 업종별 차별화,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허용범위를 확장하여 포괄적 규제 완화

② 산업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조정

- 코로나19 이후 경기악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전환 지원
- 사업전환법 재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도전 R&D와 사업전환 R&D 지원 강화
-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③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규제부담 완화

- 소상공인·소기업 한시적 규제 모라토리움* 제도 적극 활용
- * 규제 신설·강화 시 원칙면제, 예외 허용(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2)
- 과감한 기존 규제 유예·면제 추진 검토(예: 주52시간제, 화평법·화관법, 원격의료 등)

13

4

정책 과제

스마트 클러스터로 리쇼어링

■ 국가 브랜드파워 개선을 기회로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을 통한 국내 제조업 르네상스 추구

①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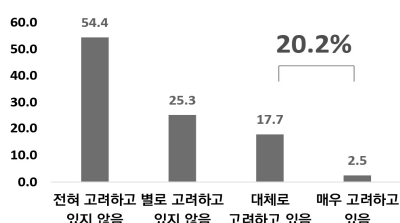
- 기업 특성 및 업종별이 상이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업종*에서 리쇼어링 수요 포착

*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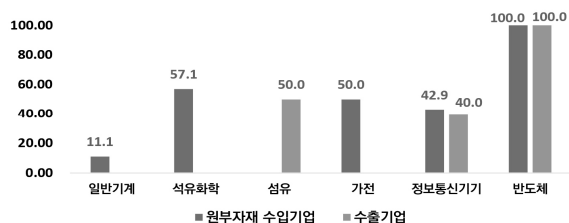
- 원·부자재 수입 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가전, 일반기계 순

- 수출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섬유, 정보통신기기 순

전체 응답기업의 리쇼어링 고려 비율



업종별 리쇼어링 고려 비율



주: 전체 원부자재 수입 기업 응답 336개 중 해외공장을 보유한 44개 기업과 전체 수출기업 응답 336개 중 해외 공장을 보유한 35개 기업 기준 업종별 리쇼어링 고려 비율의 막대그래프는 '대체로 고려하고 있음'과 '매우 고려하고 있음'의 응답 비율

14

4

정책 과제

스마트 클러스터로 리쇼어링

PIE 확장을 통한 우수 제조기업의 자발적 역유입 생태계 구축

- **Profit** 우수 리쇼어링 기업의 스마트 산단 입주 추진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 * 스마트 산단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관련 특화산업과 연계된 규제완화 추진
 - ** 특화 스마트 산단별 전담 TP를 통해 리쇼어링 희망 기업과 지원인력을 전담 매칭,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 리쇼어링 희망 시점부터 국내 복귀까지 전담 관리
- **Incentive** 지역별 특화 스마트 산단 복귀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기업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As-Is		⇒	TO-BE	
요건	업종별 소분류(3단위) 일치		요건	지역별 특화산업 추진 시 일치요건 예외
입지설비 보조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경기·인천까지 확대
인력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		인력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수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우선지원, 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별도 지원제도 도입
금융지원 등 기타지원			금융지원 등 기타지원	유지

- **Environment**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자발적 역유입 촉진
 - 지역별 특화 스마트 산단 중심의 조세지원 확대, 행정처리 및 법률자문 지원 등

15

4

정책 과제

집행 효과와 협력을 위한 스마트 정책 전달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필요

스마트 경제시대 정책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 정책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 기술보증, 정책금융 지원 시 지원자격 명확히 제시 후 선착순 지원 체계 구축
 - SNS나 신용카드 등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으로 지원대상 즉각 식별
- 지원의 적시성 확보 ⇒ 과감한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선지원 후 정산·환수 / 실무자 면책 및 재량확대
 - 미국 코로나 지원법에서는 대상 집단 전체를 피해집단으로 가정
 - 스위스 중소기업 신속대출의 경우 서류제출 등 사전절차 대폭 간소화

주체간 신뢰에 기초한 협업의 토대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

- 개방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 ⇒ 신뢰·공정·투명성의 제도적 기반 확립
- 독점규제로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 다수가 편익을 공유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예: 배달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제재를 통한 신뢰·공정성 제고

16

II Chapter



공공벤처펀드 조성방안

Ky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1

플랫폼 비즈니스와 유니콘벤처 시대의 도래

■ 유니콘기업의 현황 및 추세

① (정의) 10억불 이상의 기업가치를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 미국의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링크드인(Linked in), 페이스북(Facebook)
- 중국의 샤오미(Xiaomi), 디제이아이(dji)



② (현황) 세계 유니콘기업은 총 472개로 미국, 중국이 주도

한국 유니콘기업은 11개로 세계 6위 수준

* 국내 유니콘 기업은 총 11개(324.8억\$)로 '18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유니콘기업 국가별 현황 및 추세('20.5 기준) 〉
(단위:개, %)

구분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한국	기타*
기업수	226	121	24	21	12	10	58
비중	47.9	25.6	5.1	4.4	2.5	2.1	12.3

※ 출처 : CB-insight

* (기타)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프랑스, 일본 등 22개 국가로 기업수 7개사 이하 등재



〈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 〉

순번	등재시점	기업명	업종	기업가치	창업연도
1호	'14.05	쿠팡	E-commerce	90억\$	'13년
2호	'14.11	엘로모바일	Mobile & Tele communications	40억\$	'12년
3호	'17.04	L&P 코스메틱	Consumer & Retail	17.8억\$	'09년
4호	'18.08	크래프톤	Game	50억\$	'07년
5호	'18.12	비바리퍼블리카	Fintech	22억\$	'13년
6호	'18.12	우아한 형제들	Internet SW & services	26억\$	'11년
7호	'19.02	아놀자	Travel	10억\$	'07년
8호	'19.04	위메프	E-commerce	26.5억\$	'10년
9호	'19.06	지피클럽	Cosmetics	13.2억\$	'03년
10호	'19.11	무신사	E-commerce	18.9억\$	'12년
11호	'19.12	에이프로젠	Health	10.4억\$	'00년



18

2



유니콘을 잉태하는 벤처 생태계의 조건

-  **미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벤처 생태계 특징**
-  **중국 중관촌(中關村)의 벤처 생태계 특징**

1 젊고, 기업가적 역량과 열정이 충만한 창업자

-  **UC 등 대학 중심의 기술기반 우수한 창업가 양성에 집중**
 - *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Californi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60))
 - 창의적 혁신가 중심의 창업을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 문화 조성
-  **창업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VC투자 활발**
 - * 비상장 기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장외시장 신삼판(新三板) 등장 ('06년~)
 -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은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공모하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2 성장 단계별 투자되는 풍부한 모험 자본

-  **창커*들의 출현은 기술 인재의 창업과 투자자의 모험적 투자 진작**
 - *창커(창) + Maker의 발음과 유사한 중국어 한자 '창' 합성어, 혁신적인 젊은 창업가(이원화, 박지현,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  **미국 77% 수준의 대규모 VC,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 투자 활발**
 - * 중국 전체 VC투자의 80%가 중관촌에 집중되고 투자규모 지속 확대

3 역량이 우수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  **Y-Combinator 등 세계 최고의 엑셀러레이터 집중**

19



2

유니콘을 잉태하는 벤처 생태계의 조건



4 창업 벤처와 대기업들 간의 협력적 공생 관계

-  **북경대 등 명문대와 국가과학연구소가 밀집된 클러스터 조성**
 - * 베이징은 산·학·연·관 중심의 빅데이터 및 AI 산업을 통한 창업 촉진 활동 활발

5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 할 수 있는 자본시장

-  **세계 최고의 VC 집중, VC연계 벤처금융 전문은행 활동**
 - * 미국 전체 VC투자의 39.4%에 해당하며, VC 44개 기준, 약 1,130억\$ 투자
-  **M&A를 통해 투자금 회수 후 신규창업투자 등 선순환 구조 확립**
 - * ('16년 기준) M&A를 통해 438억\$(687건), IPO를 통해 29억\$(39건)

6 신산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  **혁신 창업을 위한 법체계 조기 구축 등 제도 마련**
 - * 민간합동지원체계(SBDC), 베이돌법(Bayh-Dole Act) 등 제도 환경 마련
-  **세액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 VC투자액 70%에 대해 세금공제 적용(개인투자자 동일 적용)
 - 기술기반 창업 및 사업화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마련

20

3

디지털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



사진 : marianamazzucato.com

Mariana Mazzucato (2013)
“기업가형 국가(The Entrepreneurial State)”

→ 혁신에 대한 투자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리,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민간의 후속 투자 체제 구축

21

4

해외 공공벤처펀드 사례: 미국

인큐텔 (In-Q-Tel, IQT)

- ① (개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식별하고 투자하는 비영리·비공개 벤처캐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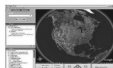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1991년 2월, 정부 후원 벤처캐피탈 회사인 'In-Q-Tel' 창립

- ② (목적) CIA의 정보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기술기업 투자

- CIA의 R&D 역량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플랫폼

-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투자

■ 인큐텔 주요 투자 성공 사례



Google Earth 내 인터랙티브 3D 지면 시각화 기술(2003)
- 미 국방부의 이라크 주둔군 지원에 사용



CLOUDERA 빅데이터 솔루션 투자(2010)
- 국토안보부와 파트너 체결, 정부기관 대량 데이터 저장 및 분석



Q-CTRL 양자 제어 클라우드 플랫폼(2020)

22

4

해외 공공벤처펀드 사례: 독일

하이테크창업자 펀드 (High-Tech Gründerfonds, HTGF)



- ④ (개요) 공공 주도 벤처캐피탈 펀드로 첨단기술 소유 기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
 - HTGF를 비롯하여 유럽 투자펀드 등이 단기적으로 공적인 위험자본 투자자 역할 수행
 - LP(Limited Partners): 독일연방정부, KfW, 민간기업(BASF, Siemens, 도이치텔레콤) 등 구성
 - * KfW: 독일연방정부의 공공개발은행
 - * Deutsch Telekom AG
- ④ 2020년 4월 1일, 20억 유로 지원 결정 등 스타트업 지원 규모 확대
 - HTGF I(2005년 설립 272백만 유로), II(2011년 설립 304백만 유로), III (2017년 설립 310백만 유로) 구성
 - 독일 연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미래펀드(Zukunftsfond fuer Start-ups)' 조성 계획
- ④ 적절한 수준의 정부예산 손실을 감수, 혁신형 초기기업 투자 집행으로 시장소외 영역 투자 확대 및 민간 모험자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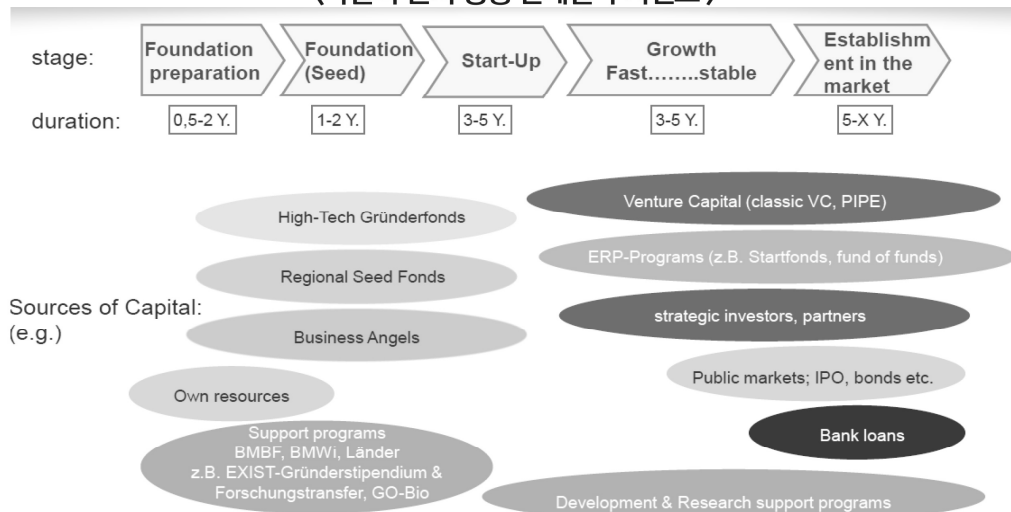
23

4

해외 공공벤처펀드 사례: 독일

메르켈 정부의 벤처캐피탈(VC) 산업 구조 개혁 사례

〈독일의 벤처 성장 단계별 투자펀드〉



24

4

해외 공공벤처펀드 사례: EU



영국



ECFs, UKIIF, ACF 등 정부주도 체계적 투자

- Enterprise Capital Funds ('06년~) 시드와 초기단계 투자를 담당
- U.K. Innovation Investment Fund('09년~) 녹색에너지, 첨단제조, 생명과학, 디지털기술에 주로 투자
- Angel Co-investment Fund('11년~) 고성장 초기투자 유치 기업의 후속 투자 집중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Yozma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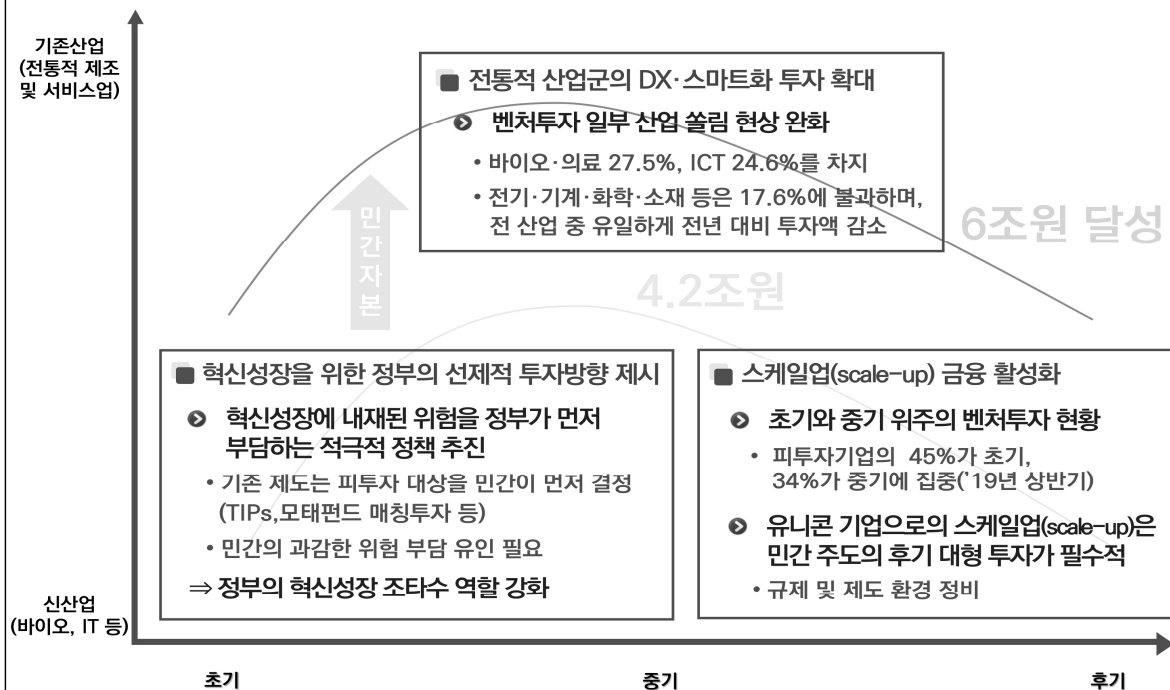
-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
- 혁신 창업을 지향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민간 중심 벤처캐피탈 시장 조성 기여



25

5

DX 동력으로서 모험자본 투자 확대



26

6

우리나라 모태출자펀드의 출자자별 구성 현황

(단위: 억 원, %)

출자자 구성	2018	2019	2020.03
정책 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11,564 (38.14)	11,522 (42.82)	1,227 (46.51)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6,956 (22.94)	4,316 (16.04)	377 (14.29)
연기금 (연금, 공제회)	4,150 (13.69)	1,430 (5.31)	300 (11.37)
GP (창투사, 신기술 등)	3,114 (10.27)	2,519 (9.36)	223 (8.45)
일반법인 (영리목적법인)	2,431 (8.02)	3,655 (13.58)	251 (9.51)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성장사다리펀드 등)	1,692 (5.58)	1,541 (5.73)	258 (9.78)
개인 (일반 개인)	331 (1.09)	194 (0.72)	2 (0.08)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83 (0.27)	1,732 (6.44)	0 (0.00)
합계	30,320 (100.0)	26,909 (100.0)	2,638 (100.0)

자료: 한국벤처투자(주), MarketWatch Vol.4,16,18, 재구성

27

7

정책방안 1 : 공공벤처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 출자

- ④ (운용방안1)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벤처펀드 자금공급 역할 강화를 위한 자원 확충 필요

– KVIC이 이미 공공벤처펀드 역할을 수행하는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관리

- ④ (운용방안2) 모태펀드 출자 집중한 전문화된 공공 VC 설립

–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와 새로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의 출자가 집중된 공공벤처펀드를 운용하는 VC 설립
– 인큐텔의 사례처럼 민간 VC의 관리방식을 채택하되, 투자결정의 목적을 “혁신생태계 구축”에 둠
– 대학 및 연구소 기술자회사, 민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액셀러레이터 등을 공공펀드 운용 주체로 육성

- ④ (운용방안3) 기존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 전환 및 확대

–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초기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
– 중진공의 금융지원 방식을 복합금융으로 전환하여 공공투자 역할 수행

28

7

정책방안 1 : 공공벤처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 회수

④ (운용방안4) 민간 Financial investor 및 Strategic investor의 후속 투자 유인 강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인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활동이 강화될 전망
- 공공벤처펀드 운용 시 단순히 투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과 확대된 민간 Financial investor 그룹과의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여 후속 투자 및 지속적 스케일업 유도
- 대기업의 인센티브가 R&D 비용지출에서 R&D 기업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인세액 공제제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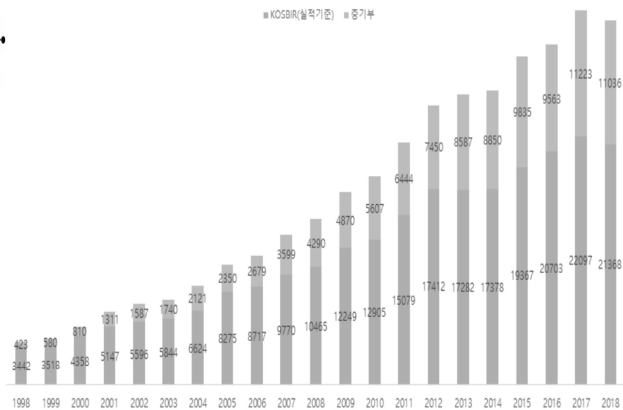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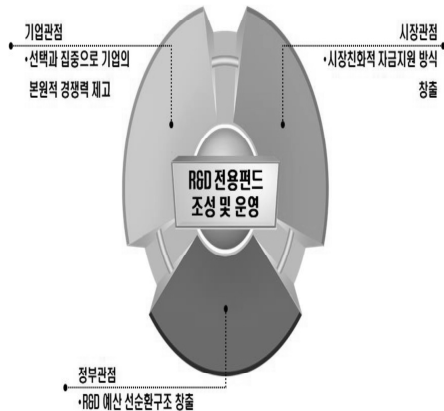
29

7

정책방안 2 : R&D 투자펀드 조성

- ④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규모의 R&D 투자 국가인 동시에 중소기업 R&D 지원 국가
 - KOSBIR 예산은 제도시행 된 1998년 3,442억원 이후 누적 35조 2,551억 원 투입
- ④ 보조금 출연 방식의 지원을 투자 펀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출처 : 김선우, 김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03

3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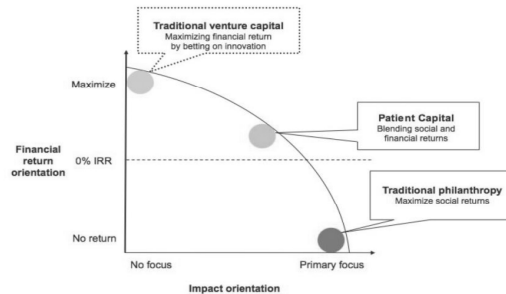
정책방안 3 : Patient펀드 조성

① (Patient펀드) 특정 아이템의 단기적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 자본 수익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에 주력
- 장기적 관점의 자본 회수와 기업성장에 따라 강력한 경영지원을 수행

②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에게 투자하는 펀드로 시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장기과제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중

- 유럽과 미국 등 사회적 기업 창업에 투자하는 펀드(Acumen Fund, 퀘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금)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장기 프로젝트에도 투자



31

7

정책방안 3 : Patient펀드 조성

① 소셜임팩트 펀드 개요

(배경)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유도와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지원내용) 모태펀드가 소셜벤처 전용 펀드에 출자

(펀드내용) '20년 300억원 규모 조성 (모태 출자 180억원)

(투자분야)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

*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

- 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
- ② 사회통합, 사회문제, 공동체, 환경/생태 분야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 비영리 조직

* 현재 KVIC에서 조성하고 있는 소셜임팩트펀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

32

7

정책방안 4 : 대기업의 CVC 설립 규제 완화

- (필요성) 대기업에 의한 창업 벤처 투자와 M&A를 확대, 대기업 유보 자금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 벤처 투자 금융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벤처투자를 위한 창투자 소유가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2항)
 - CVC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증손회사 지분을 100% 의무적으로 보유
 - 현재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투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3항) → 추가 투자 불가
- 제한적 허용안(예시)
 - ① '벤처투자'만을 수행하는 '전업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이외 리스, 카드, 대출 등 금융행위 금지)
 - ② 일반지주회사 100% 소유 완전 자회사 (벤처투자에 활용되는 자본금을 외부에서 조달 금지)
 - ③ 계열사 내부자금으로만 투자펀드 조성 (금융기관 특징인 외부자금 조달 기능 제한)

33

7

정책방안 4 : 대기업의 CVC 설립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與 김병욱 “일반지주사의 CVC 주식 허용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2020.06.03)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성전문금융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통상 CVC는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 CVC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에 나날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34

7

정책방안 5 :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반의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 국내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 현황

- 일반 개인들의 저축성 소액 투자를 벤처기업 투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
-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한도 15억원 이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20년)

❖ 블록체인 기반의 공신력 있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을 육성할 필요

-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정보와 공신력을 갖춘 기관들이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함
-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자 모집 뿐 아니라 벤처투자 펀드를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투자 제한 등 규제 완화 (업종 및 발행한도 제한 완화)



〈클라우드 펀딩 범위 확대〉

출처 : 매일경제, 2020.02.19

35

감사합니다.

보조발제/토론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 상생협력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김 남 주 변호사

보조발제/토론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 상생협력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김 남 주 변호사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가. 문제제기

- (1)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
- 다양한 상생협력 교섭 제도 시행 : 납품대금 조정제도, 공정거래 등 분쟁조정제도, 사업조정제도, 가맹사업거래 상생교섭 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강화
 -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술탈취 사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선3사하도급법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 공정위는 지난 1월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공정위 발표 공정경제 주요 성과 중〉

-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① **(갑을문제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甲)**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 * 피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 : 하도급: 86.9%(‘17)→95.2%(‘19) / 가맹: 73.4%(‘17)→86.1%(‘18) / 유통: 84.1%(‘17)→94.2%(‘18)

(2) 하지만 대-중소기업 경영 격차 확대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아직 부족”(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 중 발언)

- 전산업 영업이익액 중 대기업이 2/3, 중견+중소기업이 1/3(2018년 기준) 차지, 대기업 영업이익액 비중은 전년대비 3.1% 증가, 중견+중소기업 영업이익액 비중은 3.1% 감소

(3) 대-중소기업간 분배 개선에 주목해야

-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 개선돼야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강화, 소득주도성장 실현, 소득의 양극화 완화 전제 충족
-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 개선돼야 R&D 투자 능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발전

(4) 수직적 & 전속적 산업구조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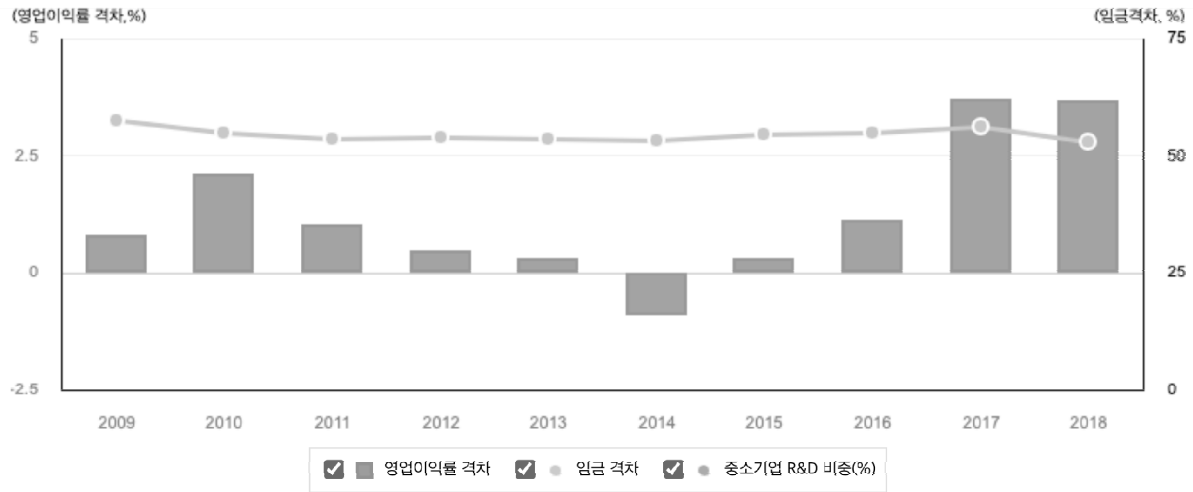
- 수직계열화로 인해 대기업에 중소기업 종속 ⇒ 중소기업의 낮은 협상력, 기술력, 기술 투자재원 부족
- 수직적, 전속적 산업구조 ⇒ 기술개발 유인 부족, 기술탈취 위험 ⇒ 소부장 글로벌 중소기업 탄생 어려워

나. 대-중소기업 경영지표

(1) 대-중소기업의 격차

-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3.7%), 임금 격차(53.1%)
- 매출액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서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앞서
- 중소기업 R&D 비중은 전산업 대비 1/5 이하, 정체 또는 감소 경향

〈그림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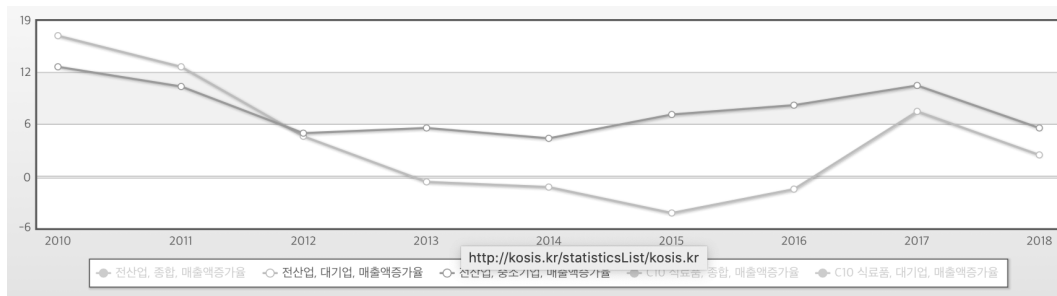
- * 영업이익률 차이(제조업) : 대기업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 임금 격차(제조업)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대기업 = 100)
- * 중소기업 R&D 비중 :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의 R&D 예산 비중

〈그림 2〉 영업이익률 차이, 임금격차, 중소기업 R&D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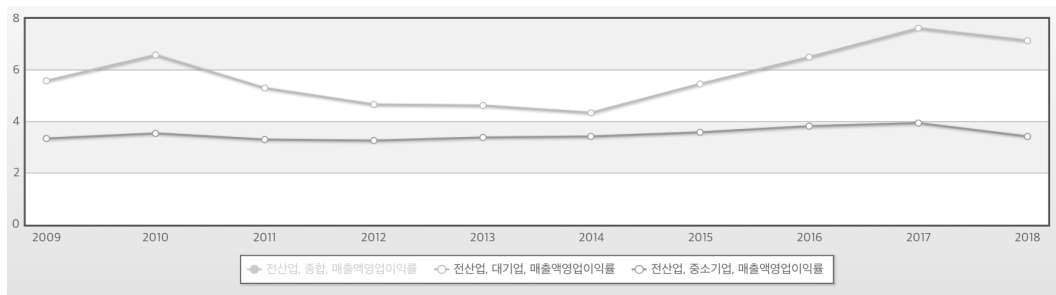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영업이익률 차이	2.1	1.0	0.5	0.3	-0.9	0.3	1.1	3.7	3.7
임금 격차	54.8	53.8	54.1	53.8	53.2	54.5	54.9	56.2	53.1
중소기업 R&D 비중(%)	19.6	19.7	20.1	18.2	17.6	18.5	18.9	17.4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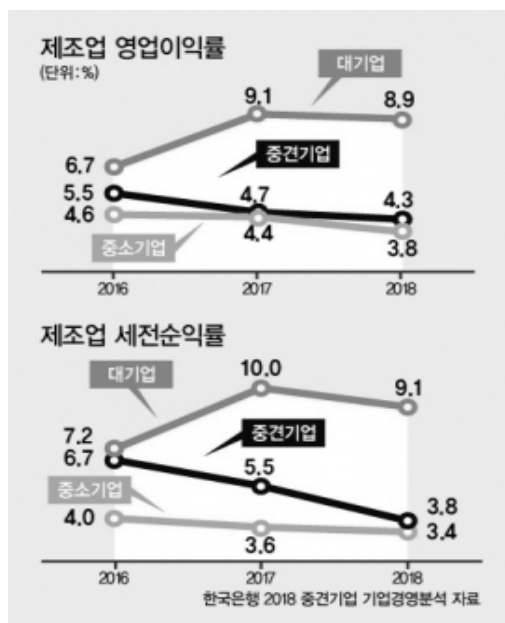
〈그림 3〉 매출액 증가율



〈그림 4〉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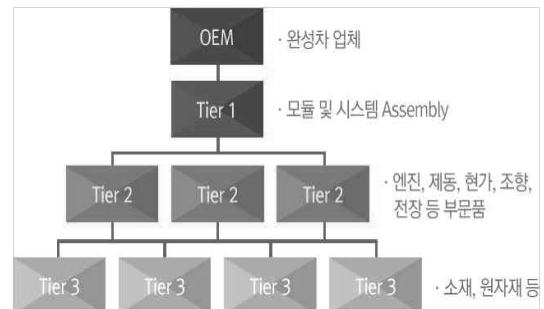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영업이익률, 세전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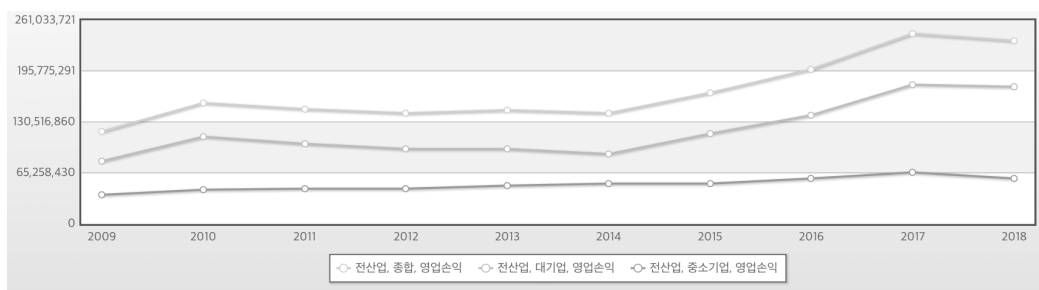
*출처 : 헤럴드경제 2019년 12월 11일자

〈그림 6〉 완성차-부품사 수직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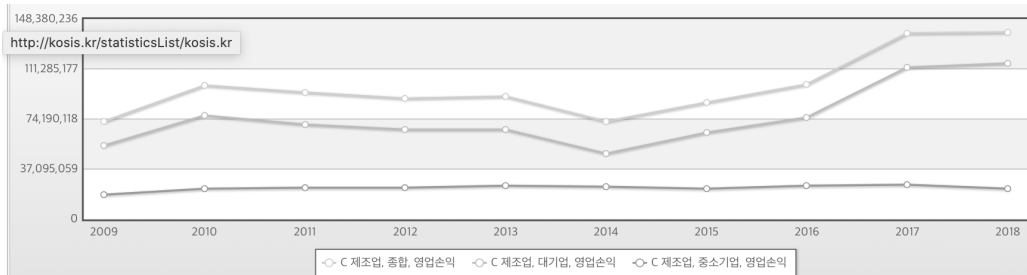


*출처 : 삼정 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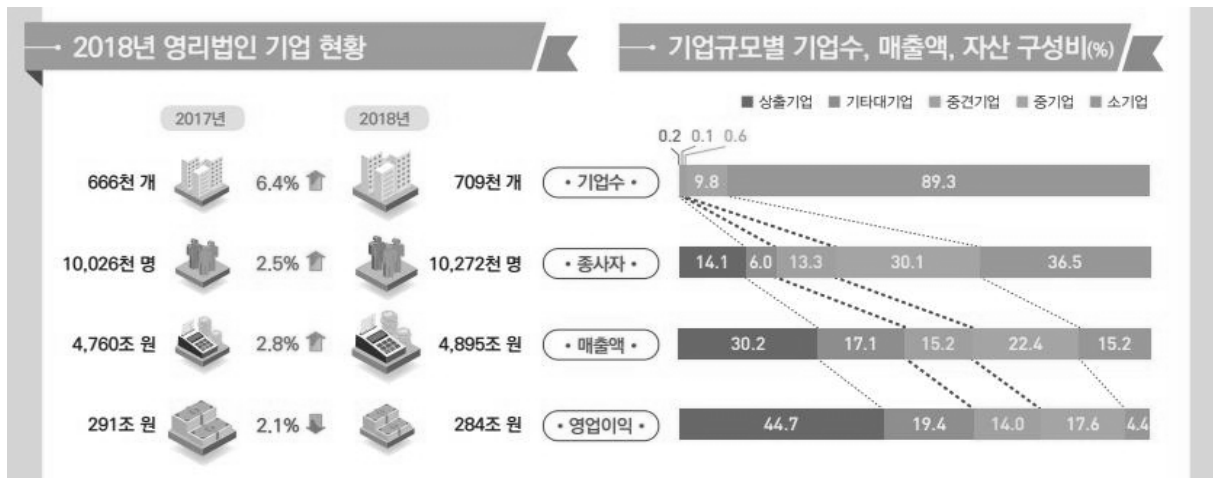
〈그림 7〉 영업이익액-전산업



〈그림 8〉 영업이익액-제조업



〈그림 9〉 2018년 영리법인 기업현황, 기업규모별 기업수, 매출액, 자산 구성비(%)



*출처 : 통계청

○ 소수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약 2/3 차지

2018년, 대기업 영업이익액은 182조 2,230억 원, 전체의 64.1%(전년비 +3.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14.0%, 22.0%

- (2) 이러한 격차는 수직계열화 촉진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고, 그 결과 축적한 여유 자금, 인력, 경험 등을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획득
- (3) 대-중소기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필요

다. 수직적 산업 구조¹⁾

- (1) 산업화 시기 계열화촉진 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 형성,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사업 구조와 재무적으로 종속됨

〈표 1〉 자동차부품 1차 협력기업의 복수거래 현황

완성차업체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1차 협력기업수	424	219	98	65	48	29
비중	48.0%	24.8%	11.1%	7.4%	5.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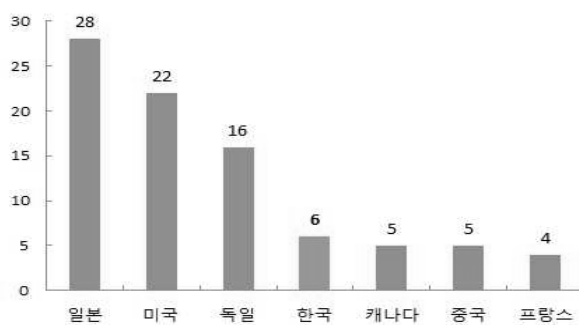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주 : 국내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대우버스, 타타대우 등 7개

(2)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부품기업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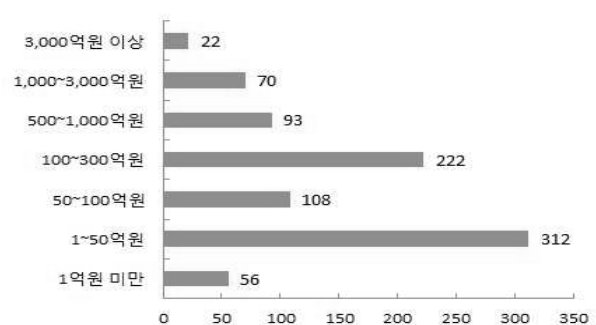
-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사에 한국 6개사 불과
 - 현대모비스(7위), 현대위아(34위), 만도(46위), 현대파워텍(48위), 한온시스템(49위), 현대다이모스(56위)
 - 일본(28개사), 미국(22개사), 독일(16개사) 등이 66%

〈그림 10〉 세계100대 자동차부품사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그림 11〉 국내 자동차부품사 매출액 규모



자료 : Automotive News

주 : 2016년, 단위 : 억달러, 개

- 규모의 영세성 : 다수 자동차부품사가 규모의 영세성으로 독자적인 기술 및 자본 축적이 미흡
 - 1차 협력기업 업체당 평균 납품액은 감소세 지속
 - 1차 협력기업 평균 납품액(억원) : 591('14) → 549('15) → 544('16)

1) 출처 : 윤희한 교수

- (3) 중소기업은 독자적 기술력, 경쟁력이 약화되고 더욱 종속 심화
- (4) 종속적 구조를 존치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도약 난망

라. 정책 방향

- (1) 중소기업 경영지표 개선에 방점

다양한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익 증가시키는 정책이 중요

- (2) 상생교섭 활성화 : 乙들의 상생교섭력 강화

갑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장 수평맞추기 필요

- (3) 공정거래 행정력 강화 : 乙보호법 규범력 강화

현재 乙보호법이 현장에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 (4)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공정위 신고 등 무용론 대두, 갑질 만성화 우려

2 상생교섭 활성화 : 乙들의 상생교섭력 강화

가. 현행 상생교섭 제도

(1) 현행 중소기업 분야의 대표적 상생교섭 제도

- 가맹본부,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등 강자에 대응하기 위한 약자의 단체화
-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회·위원회가 교섭대상 간 분쟁을 중재
-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

〈표 2〉 현행 상생교섭 제도

강제성	제도	교섭대상	목적	교섭활성화 방법	한계
약 ↑	가맹사업거래 상생교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화	교섭 거부 시 강제방법 없음
	납품대금 조정제도	원사업자-수급사업자(기업체 ,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을 때 납품대금 조정	수급사업자의 단체화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대형유통기업·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 대표, 시의원, 소비자 및 시민단체	지역중소유통의 균형발전	협의회가 중재	
강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분쟁조정	협의회가 중재	교섭 거부 시 강제방법이 없음 다만, 분쟁조정결렬시 공정위에 신고 가능
	공정거래분쟁조 정협의회	사업자-사업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약관분쟁 조정협의회	사업자-고객			
	대리점분쟁 조정협의회	공급업자-대리점			
	중소기업적합업 중제도	동일업종 대기업등-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신청을 단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재·권고	권고가 가능하나, 강제성은 약함
	사업조정제도	동일지역, 동일업종의 대기업등-중소기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신청을 단체, 자율조정을 실패할 경우 조정심의회가 중재·권고, 특히 정부가 직접 개입	조정권고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단체구성·협의권 입법 시도²⁾

(1) 대리점법 : 대리점단체 구성·협의권 부여 관련 20대 발의 각 개정안의 비교

내용	정재호(안)	심상정(안)	이학영(안)	추혜선(안)
대리점단체 구성권	○	○	○	○
대리점단체 협의요청권	○	○	X	○
공급업자의 성실협회의무	○	○	X	○
다수대리점단체 우선협의	○	○	X	○
협의를 부담간섭 및 부당경쟁제한 금지	○	○	X	○
가입시 불이익제공 또는 가입금지약정 금지	○	○	X	○
불이익제공 등의 경우 시정조치	○	X	X	○
불이익제공 등의 경우 과징금	○	X	X	○
불이익제공 등의 경우 보복조치	○	○	○	○
조문 위치	제5조의2	제5조의2	제11조의2	제5조의4

(2) 가맹사업법 : 협의 요구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관련 20대 발의 각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협의 요구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	시정조치 부과 가능성	과징금 부과 가능성
현 행	성실히 협의	-	-
전해철의원(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이학영의원(안)		○	-
정인화의의원(안)	10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음	○	○
김해영의원(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지상욱의원(안)	부당하게 협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
김병욱의원(안)	10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음	-	-

※ 전해철 의원, 20대 발의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20.06.08.) : 위 표 내용 이외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공정위 신고하도록 함

○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

- 협의 요구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2) 출처 : 이동주 의원실

다. 현행 상생교섭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 현행 상생교섭 제도는 가맹본부 등 강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단 없어 상생교섭 활성화 미흡
(개선방향)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협의 요구에 대한 가맹본부 등 협의 개시 의무화, 의무 해태 시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대리점단체 등의 구성 근거 미흡
(개선방향)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단체 공정위 신고제, 가입시 불이익 제공 금지

라. 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 교섭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 (1)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인정할 필요
 -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 예외 규정 사문화
 -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중소기업들이 공동하여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인가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규정(작년 8월 개정)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공동행위에 적용 불가
 - 이 규정 조문의 단서에서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금지
 - 이를 구체화한 중기부 고시에도 거래상대방이 대기업인지 최종 소비자인지 불문하고 가격인상을 일률적으로 금지
 - 하지만, 하도급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와 같이 B to B 거래는 B to C 거래와 달리 납품대금 인상이 곧바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금지할 필요성 낮아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제도 사문화
 -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협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없고,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 인가도 사실상 불가능

- 오로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유일하나 실제 조정신청 사례 알려지지 않아

○ 개선방향

- (공정위 적극 행정)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인가 필요 ⇒ 자료요구, 국정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하도급거래 또는 위수탁거래를 대상으로 한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
- (상생협력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선방안과 같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권, 중기부 신고제, 가입시 불이익 금지, 납품대금을 포함한 협의권, 위탁기업이 협의 해태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마. 4차 산업시대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생교섭제도 필요

(1) 문제의식 - 4차산업, 혁신기업, 벤처기업은 무조건 선인가?

-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이슈, 타다와 택시 갈등, 플랫폼 온라인거래 종사자의 노동자성, 쿠팡 배송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 * 중앙노동위 타다 운전기사 노동자성 인정
- 골목상권에 대기업 진출 문제가 혁신 스타트업과 자영업자간 갈등으로 전환 우려

(2) (행정개선) 혁신기업 상생인식 제고 및 상생문화 정착 ⇒ 국정감사

- 공공벤처 등 공공자금을 혁신기업 투자 또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상생지표 고려
-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시 신규 투자 대상 제외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상생협약안 제정·보급

(3) (개선 입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구매거래 중개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 등은 적용 안 돼 신규 입법 필요
- 상생협약 체결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거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법제화

-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여, 2020년 7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 오픈마켓, 앱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를 포함하여 SNS와 같은 검색엔진(Facebook, Instagram 등)도 적용대상

- 「온라인 플랫폼거래 상생협력 및 공정화를 위한 법률」(가칭)
 - ①불공정 약관 규제, ②투명한 정보공개, ③관련 단체 구성,
 - ④상생협약 체결 촉진, ⑤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⑥피해구제 수단

3 乙보호법 규범력 강화

가. 급속한 산업융복합화에 맞춰 하도급법 적용범위 대폭 확대

(1) 현행 하도급법 적용 범위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특정한 ‘업’에 종사해야 적용되는 구조. 적용되는 업을 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한정 예를 들면, ①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해야 적용. 제조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 위탁할 경우 적용 안 돼
- 급속한 산업 융복합화에 뒤쳐진 현행 체제
 - 무인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과 IT.SW 융복합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가 중소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에 소프트웨어 작성을 위탁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안 돼³⁾
-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 불가
 - 위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여 중기부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하나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개선입법)하도급법 개정 방향

모든 위수탁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도급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업’으로 제한하는 내용 삭제

3) 하도급법, 오승돈

나. 기술탈취 방지 강화

- (문제점)대기업도 여전히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미이행, 중소기업의 기술을 저평가해 '2원화', '수평전개'라는 명목으로 다른 중소기업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는 관행 여전 ⇒ 기술력 갖춘 소부장 기업 육성에 불리한 환경
- (행정력강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하여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탈취 조사 강화,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주관 부처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기반 조성역량 집중
- (개선입법) 증거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강력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필요

다. 조사방해 행위 처벌 강화

(1) 현대중공업 조사방해 사건

- (방해행위) 현대중공업은 2019. 10.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직적으로 컴퓨터 101대와 하드디스크 273개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등에 은닉하여 조사를 방해
- (숨방망이 제재) 공정위는 법인(현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행위자인 직원 2명에게 각 2,500만원 부과했으나 고발조치 없음.

(2) 현행 하도급법 처벌규정 미비

-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 방해행위, 자료 은닉·폐기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조항 신설 (2017년 4월 개정)
- 하지만, 하도급법에는 조사 방해행위 등을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고,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만 도입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관할 법률에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3) 이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정거래법 이외에 공정위 관할 법률에도 도입할 필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과태료 1억 5천만원을 내는 것이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벌점(일정 점수 이상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것보다 이익

(4) (개선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조사방해 행위 형사처벌 규정 도입

라. 전속고발권 폐지(개선입법)

- 공정위는 압수수색권이 없고, 여전히 조사방해 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보아 적발되지 않는 방해행위까지 고려할 경우 범위반행위를 명확히 조사권한 부족
- 공정위 조사에 장기간 소요되고, 고발 후 검찰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될 우려
 - * 실제로 중기부는 공정위 제재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검토할 때 이미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요청 무의미한 사건 있다고 함
- 특히 담합사건 이외의 공정위 소관 을보호법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는 경제적 분석 별로 필요 없어. 검찰도 이 분야에서 수사역량 충분

마. (개선입법) 광역지자체에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는 하도급법 등 을보호법에 따른 조사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권 부여 필요

4 민사적 구제 강화

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1) 문제점

-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손해배상)는 2011년 하도급법부터 도입되고 있고, 그 적용 대상과 배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법 제안이 있음
- 하지만, 현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사문화된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된 사건은 단 1건으로 1.5배 배상액이 2심에서 인정됨. 그 이유는 증거편제로 인한 입증곤란으로 1배 손해배상도 인정받기 어려워 손해배상액 0원에 3배를 곱하더라도 0배. 입증완화 전에 배상액 배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그림의 떡’. $0 \times 100 = 0$
 -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고려사항이 다소 추상적, 법원 적용 의지 약화

(2) 개선 방안

- (개선입법) 입증완화, 증거개시제도 등 도입하여 증거편제 시정
- (개선입법)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 쟁점은 정당한 납품대금의 입증에 있는데, 통상 지불되는 납품대금을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
 - * 판례는 일률적 단가 인하의 경우에도 인하 전 금액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 수 없고 공정위 또는 피해기업이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
 - (하도급법 등 개정)통상 납품대금을 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추정
- (행정개선) 표준납품대금 연구 발표, 통상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항목, 항목별 원가, 수량, 품셈, 원단위, 계산식에 관한 통계 수집, 연구, 공표 ⇒ 국정감사
 - 중기중앙회가 표준납품대금을 연구하여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져
 - 중기연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서 표준납품대금을 조사 발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회피 가능
- (개선입법) 징벌적 손해배상 고려사항 추가
 - 추가 고려사항 : 위반행위 수법, 피해자의 재산상태, 조사 이후 위반행위 지속 기간

등, 조사 협조, 과거 범위반 전력

- (법원행정) 법원행정처가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같이 징벌배상에 관한 재판실무 기준을 연구하고, 관련 재판부가 그 연구를 참고하여 재판에 활용
- (개선입법) 징벌배상 배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현행 3배 이하)

나. 증거확보 방안

(1) 문제점

- 대기업이 보유한 증거를 을들이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 대기업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등 대범하게 증거 제출에 비협조
- 대기업조선소는 사내하도급회사에게 전자로 문서를 교부하고, 사내에 인증된 컴퓨터에서만 열람가능하도록 한 다음,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접속을 할 수 없고, 사외로 반출할 파일을 열 수 없도록 조치 ⇒ 기본적인 계약서도 확보 못하는 등 법적 대응할 증거 부족

(2) (개선입법)(≡특허법 제132조)

- 자료제출제도 도입
 - 하도급법 등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도입
 - 자료 제출 명령할지 여부를 비공개로 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시 명령권 부여(정보공개법 유사)
 - (미제출시 제재) 자료기재에 관한 주장 입증 간주, 예외적으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 간주
- 전자로 서면교부 규정 보완
 - 전자로 서면교부시 인쇄, 파일 열람 가능하지 않으면 미교부로 간주(일본 하청법 유사)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제3회 중소기업분야 ————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